

연료첨가제 불법저장 2618건 적발

행자부, 세녹스·LP파워에 유사제품까지 ... 화재위험 대비 단속 엄격

행정자치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 불법 저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003년 12월11일부터 2004년 2월21일까지 전국 155개 소방관서에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시한 결과, 자동차 연료첨가제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총 2618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1335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45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827건에 대해서는 위험물 제거 등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100리터 이상의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소방법상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저장·판매해야 하지만 대부분 허가 없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위험과 소방법의 규범력 저하, 공권력에 대한 불신 초래 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법 및 시·도화재예방 조례를 엄격히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5>